

## 형사정책

문 1.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다.
-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문 2. 리스트(F. von Liszt)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원인은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범죄원인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 ② 하멜(Hamel) 등과 함께 국제형사학협회(I. K. V.)를 창설하였다.
- ③ 범죄학과 형법학이 통합되어 총체적 형법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개선이 가능한 범죄자는 개선을, 개선이 필요없는 범죄자는 위하를,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는 격리(무해화)를 하여야 한다.
- ⑤ 부정기형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폐지, 집행유예·벌금형·누진제도의 합리화,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처우를 해야 한다.

문 3. 셀린(T. Sellin)이 주장한 문화갈등이론(cultural conflict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집단의 문화적 행동규범과 사회전체의 지배적 가치체계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관계가 범죄원인이 된다.
- ② 동일문화 안에서 사회변화에 의하여 문화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일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한다.
- ③ 범죄학적으로 의미있는 문화갈등은 합법적 행위규범과 비합법적 행위규범이 다른 경우이다.
- ④ 문화갈등이 있게 되면 법규범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 ⑤ 문화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행위규범이 모호하고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회통제가 약화되어 보다 용이하게 범죄나 일탈행위에 이끌리게 된다.

문 4. 현행법상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의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 ②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이지 유죄판결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벌금형도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 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1년 기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5. 현행법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 ③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④ 가석방 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 ⑤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문 6. 암수범죄(숨은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덜랜드(E. H. Sutherland)는 암수범죄로 인하여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가 모든 사회통계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다.
- ② 성매매, 도박, 약물범죄 등과 같은 범죄에서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 ③ 암수범죄는 범죄의 미인지, 범죄의 미신고, 수사기관의 재량적 사건처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 ④ 범죄통계표를 근거로 암수범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⑤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조사, 자기보고조사, 정보제공자조사 등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문 7.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합의부에서 한다.
- ②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소년에 대하여 알릴 필요가 없다.
-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소년부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행한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문 8.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이름으로 옳은 것은?

- ( A )은(는) 범죄통계적 분석에 기초하여 운동형(투사형), 세장형, 비만형 등으로 구분하고 체형에 따른 범죄특성을 설명하였다.
- ( B )은(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염색체를 조사한 결과 XYY형은 다른 정상인들에 비하여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 ( C )은(는) 부모의 범죄성과 자식의 범죄성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범죄성은 유전에 의해 전수되는 것으로 보았다.
- ( D )은(는) 크레펠린(E. Kraepelin)의 정신병질자 분류유형보다 더 세분된 10가지 유형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유형을 구분하였다.

- |                       |                        |
|-----------------------|------------------------|
| ㄱ. 제이콥스(P. Jacobs)    | ㄴ. 크레취머(E. Kretschmer) |
| ㄷ. 셸던(W. H. Sheldon)  | ㄹ. 고링(C. Goring)       |
| ㅁ. 슈나이더(K. Schneider) |                        |

- |   | A | B | C | D |
|---|---|---|---|---|
| ① | ㄱ | ㄷ | ㄹ | ㄴ |
| ② | ㄴ | ㄱ | ㄹ | ㄷ |
| ③ | ㄴ | ㄱ | ㄷ | ㄹ |
| ④ | ㄴ | ㄷ | ㄹ | ㄱ |
| ⑤ | ㄷ | ㄴ | ㄱ | ㄹ |

문 9. 여성은 심리적 형성과정에서 남성에게 대한 열등감, 시기심 등의 경향을 가지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 ① 롬브로조(C. Lombroso)
- ② 페리(E. Ferri)
- ③ 프로이트(S. Freud)
- ④ 뒤르켐(E. Durkheim)
- ⑤ 랑에(J. Lange)

문 10. 서덜랜드(E. H.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 ② 범죄행위 학습의 중요한 부분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들에서 일어난다.
- ③ 범죄행위는 일반적 욕구나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일반적 욕구나 가치관으로만 범죄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 ④ 범죄행위를 학습할 때에 학습되는 내용은 범죄기술, 범죄행위에 유리한 동기, 충동, 합리화방법, 태도 등이다.
- ⑤ 범죄자와 비범죄자간의 차이는 접촉유형의 차이가 아니라 학습과정의 차이이다.

문 11. 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결정으로써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은?

- ①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 ②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③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 ④ 경찰서장의 보안관찰을 받게 하는 것
- ⑤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문 12. 자본주의에 의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수입과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하거나 또는 자본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유형의 범죄를 적응(화해)범죄(crime of accommodation)라고 칭한 학자는?

- ① 퀴니(R. Quinney)
- ② 따르드(G. Tarde)
- ③ 베커(H. Becker)
- ④ 코헨(A. Cohen)
- ⑤ 탄넨바움(F. Tannenbaum)

문 13. 프랑스의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범죄정상설
- ② 모방의 법칙
- ③ 자연범설
- ④ 사회환경설
- ⑤ 범죄가능설

문 14. 형사사법절차에서 전환(divers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 ② 경찰단계에서의 전환으로는 훈방, 통고처분 등이 있다.
- ③ 검찰단계에서의 전환으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있다.
- ④ 재판단계에서의 전환으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있다.
- ⑤ 범죄자를 전과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문 15. 아래의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제도는?

- 책임주의와 희생평등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범행 자체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면서 행위자가 받는 고통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 평등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다.
- 범죄자의 경제상태를 실제로 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단점이 있다.
- 양형과정이 범죄인의 재산상태조사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 ① 정기벌금형제도
- ②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 ③ 총액벌금제도
- ④ 일수벌금제도
- ⑤ 노역장유치제도

문 16. 현행법상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③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으로 정역에 복무하여야 한다.
- ④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할 수 있다.
- ⑤ 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의 기간은 유기징역의 기간과 같다.

문 17.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③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 ④ 납입강제처분의 성격을 지니므로 벌금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경우에는 유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 ⑤ 재산형이 자유형으로 환원됨으로써 자유형의 폐해가 재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18. 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하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
- ② 피해자가 당해 범죄행위를 교사한 경우
- ③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으로 당해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
- ④ 피해자가 당해 범죄행위를 방조한 경우
- ⑤ 가해자에게 신체장애 등의 사유가 있어서 당해 범죄를 범하는 것이 매우 곤란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문 19. 현행법상 소년사법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사건을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고 그 중 소년보호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담당한다.
- ②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 ③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형사사건의 관할은 일반형사법원이다.
- ④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주목적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문 20. 미결수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속수사의 지양
- ② 가석방요건의 완화
- ③ 미결수용자의 과밀수용 억제
- ④ 수사 및 법원심리의 신속화
- ⑤ 독립된 미결수용기관의 설치

문 21. 피해자학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이름으로 옳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A )은(는) 강간범죄의 피해자를 연구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피해자학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B )은(는) 죄를 범한 자와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라는 도식을 통하여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하면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ㄱ. 포이어바흐(A. von Feuerbach)    ㄴ. 멘델존(B. Mendelsohn)  
 ㄷ. 가로팔로(R. Garofalo)            ㄹ. 프라이(M. Fry)  
 ㅁ. 헨티히(H. von Hentig)

- |   | <u>A</u> | <u>B</u> |
|---|----------|----------|
| ① | ㄱ        | ㄷ        |
| ② | ㄴ        | ㄹ        |
| ③ | ㄱ        | ㅁ        |
| ④ | ㄷ        | ㄹ        |
| ⑤ | ㄴ        | ㅁ        |

문 22. 소년법상 소년부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한 경우  
 ㄴ. 12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ㄷ. 검사가 소년부에서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급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ㄹ. 소년부판사가 심리 중에 소년이 12세 미만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ㅁ. 형사법원이 기소된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 |           |           |
|-----------|-----------|
| ① ㄱ, ㄹ, ㅁ | ② ㄷ, ㄹ, ㅁ |
| ③ ㄱ, ㄴ, ㅁ | ④ ㄱ, ㄴ, ㄷ |
| ⑤ ㄴ, ㄷ, ㄹ |           |

문 23.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관찰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처분은 소년부판사가 결정으로써 하는 사법처분이다.
-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④ 처분시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문 24.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범이나 가치에 대하여 단일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 ② 낙인이론은 범죄 내지 일탈행위를 사회 자체 또는 그 구성원 일반과 일탈자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데 그 이론적 특징이 있다.
- ③ 낙인이론에 의하면 범죄현실은 범죄행위의 구조와 범죄자의 선별로써 결정되며, 그 결정은 사회적 강자가 내린다고 한다.
- ④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전환(diversion) 등은 낙인이론이 형사정책적으로 의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레머트(E. M. Lemert)는 행위자의 정체성과 그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차적 일탈에 관심을 두었다.

문 25. 현행법상 소년사법절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 ②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역장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 ⑤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있으면 결정의 집행은 정지된다.

## 국 제 법

문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독립된 별개의 법질서에 속하므로 상호간에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 ② 국제법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의 유효성 및 타당성의 근거는 국제법에 있다.
- ③ 국내법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법(external state law)에 해당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국제재판소들의 일반적 입장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국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 ⑤ 국제재판소들은 국제법우위의 입장에서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을 무효로 선언하여 왔다.

문 2. 국제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관습이란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이다.
- ② 국제관습법과 조약간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의 우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③ 동일한 내용을 담은 조약의 누적적 체결을 통해서도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
- ④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에서 명백히 또는 집요하게 반대해 온 국가에 대해서는 그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ICJ의 입장이다.
- ⑤ ICJ의 판례에 따르면, 소수국가에만 적용되는 지역관습법은 성립될 수 없다.

문 3.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은 모두 비차별원칙에 속한다.
- ② 공정무역원칙을 저해하는 예로는 덤핑행위를 들 수 있다.
- ③ 수량제한금지원칙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역주의를 허용하고 있다.
- ⑤ 명료성과 공개성을 내용으로 하는 투명성원칙은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건은?

- ① 아이히만 사건(Eichmann Case)
- ② 코르푸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 ③ 로터스호 사건(The Lotus Case)
- ④ 바르셀로나전력회사 사건(Barcelona Traction Co. Case)
- ⑤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

문 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해통항권은 내륙국의 선박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 ② 외국선박이 연안국 영해에서 통항중 어로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외국의 잠수함이 국제해협이 아닌 연안국 영해에서 해면 아래로 잠항하여도 무해통항에 해당한다.
- ④ 무해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고 이 협약과 기타 국제법규칙에 합치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의 안전(security)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특정수역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문 6. 다음 도표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조문초안’(2001년)에 나타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동의 제외)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아래 도표의 A, B, C칸에 들어갈 말이 옳게 묶인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 (조문)	선행된 상대국 행위의 적법성 여부	침해이익과 보호이익간의 비례성	사태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위 (self-defense) (제21조)	A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여겨짐	-
대항조치 (countermeasures) (제22조)	위법한 행위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여겨짐	-
불가항력 (제23조)	없음	요구되지 않음	원용불가
조난 (distress) (제24조)	없음	B	원용불가
긴급상황 (necessity) (제25조)	없음	요구됨	C

- ① A - 위법한 행위, B - 요구됨, C - 원용가
- ② A - 위법한 행위, B - 요구되지 않음, C - 원용불가
- ③ A - 위법한 행위, B - 요구됨, C - 원용불가
- ④ A - 적법한 행위, B - 요구됨, C - 원용불가
- ⑤ A - 적법한 행위, B - 요구되지 않음, C - 원용가

문 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되는 대상만으로 묶인 것은? (다음 조약들은 이 비엔나협약 발효 후 체결된 것으로 전제함)

- ㄱ. 국가간의 조약
- ㄴ.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조약
- ㄷ.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
- ㄹ. UN해양법협약
- ㅁ. 국가와 다국적기업간의 협정

- ① ㄱ, ㄹ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ㅁ
- ⑤ ㄴ, ㄹ

문 8. 국가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관할권은 국가가 그 영역 내에 있는 사람, 물건 또는 사건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말한다.
- ②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국영역 내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역내관할권을 가진다.
- ③ 국가는 자국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집행관할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입법관할권은 자국영역 밖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행사되기도 한다.
- ⑤ 보편관할권은 국가주권과 국내문제불간섭을 기초로 하는 국제법체계하에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문 9.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도수역을 규정함으로써 군도국가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 ② 배타적 경제수역과 심해저 제도를 규정하였다.
- ③ 접속수역의 외측한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로 확대하였다.
- ④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였다.
- ⑤ 국제해협 통항제도의 하나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였다.

문 10.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UN의 관행상 UN총회에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단지 토론하는 것도 UN에 의한 간섭으로 인정되어 왔다.
- ② UN헌장 제2조 제7항은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아야 할 UN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③ 한 국가가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의원내각제로 할 것인가는 국내문제에 속한다.
- ④ 국제관계가 긴밀화되고 국제사회가 조직화됨에 따라 국내 문제의 범위는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 ⑤ 국가가 주권국가로서 존속하는 한 국내문제가 소멸될 수는 없다.

문 11.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매년 1회 개최되어야 한다.
- ②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 ③ WTO에서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단순과반수에 의한다.
- ④ WTO설립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WTO설립협정의 주요 규정을 제외하고는 유보가 허용되고 있다.

문 1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를 경우, A국과 B국이 체결한 조약 중 조약체결상의 하자가 추인에 의하여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은?

- ① A국 대표가 B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체결한 조약
- ② A국 대표가 B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부득이 체결한 조약
- ③ A국 대표가 자국의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정을 위반하여 B국과 체결한 조약
- ④ A국 대표가 중요사실에 대한 착오에 의하여 B국과 체결한 조약
- ⑤ A국 대표가 B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체결한 조약

문 13.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은 명시적 정부승인제도를 포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 ① 에스트라다(Estrada)주의
- ② 토바르(Tobar)주의
- ③ 스티imson(Stimson)주의
- ④ 윌슨(Wilson)주의
- ⑤ 존슨(Johnson)주의

문 14.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는 한 이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없다.
- ③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한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총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 ⑤ UN헌장 제7장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 1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은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협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영해의 폭에 관한 12해리의 규정은 영해의 폭이 예외 없이 12해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③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조시 연안국의 해안선'(high-water line along the coast)이다.
- ④ 인공섬은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 ⑤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 전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는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문 16.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상의 패널(panel)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단일 패널이 설치될 수 있다.
- ② 패널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패널위원'(individual panelists)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된다.
- ③ 패널구성에 대하여 분쟁당사국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WTO 사무총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 ④ 패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부인사로 구성되며, 패널위원은 자국 정부의 대표로서 활동한다.
- ⑤ 부패의 우려가 있는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긴급한 분쟁의 경우 패널보고서 제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문 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에 규정된 조약의 지속적 동의를 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옳게 묶인 것은?

조약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 동의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 ( ), ( ) 또는 ( )에 의하여 또는 기타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된다.

ㄱ. 체결    ㄴ. 수락    ㄷ. 승인    ㄹ. 교섭    ㅁ. 가입

- ① ㄱ, ㄴ, ㅁ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ㄱ, ㄷ, ㄹ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가, 국제기구, 개인에게 제소권이 인정되고 있다.
- ② 원칙적으로 강제적 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 ③ 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한다.
- ④ UN의 전문기구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선결적 항변에 의해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문 19.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특정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이 적용된다.
- ② 국가는 조약상의 합의가 없는 한 범죄인인도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③ 범죄인인도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④ 민사소송판결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의 인도청구도 가능하다.
- ⑤ 국가원수의 암살에 관련된 범죄인에게는 정치범불인도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문 20.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패널의 설치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 ②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일견 WTO회원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③ 분쟁해결기구(DSB)에서 패널을 설치하자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패널이 설치될 수 있다.
- ④ 분쟁당사국의 국민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대하여만 항소(appeal)할 수 있다.

문 21. 조약의 비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체결권자는 비준과정에서 전권대표가 그 지시대로 따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조약에 서명한 국가라 하더라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준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 ③ 비준 전에 입법부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국제법상 조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④ 비준 없이 서명만으로 발효하는 조약도 있다.
- ⑤ 비준된 조약은 UN사무국에 등록되어야 발효할 수 있다.

문 22.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허용어획량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 연안국은 잉여분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를 허용해야 한다.
- ②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EEZ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조력·풍력발전 등 경제적 이용을 위한 활동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 ④ 연안국은 자국 EEZ의 해저 및 그 하층토, 해저의 상부수역과 그 상공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관해 관할권을 가진다.

문 23.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어떤 개인에게 자국의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문제에 속한다.
- ② 오늘날 이중국적자는 어느 국적국으로부터도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③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내국민대우조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지위를 신장시킬 목적을 가진다.
- ④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재류국은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 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국적과 관련하여 국적부여국과 개인 사이에 '진정한 연관성'(genuine link)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 24. UN회원국의 UN탈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 ② UN탈퇴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UN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UN탈퇴는 안전보장이사회와 UN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UN창설 이후 현재까지 UN탈퇴의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없었다.

문 25.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옳은 설명만으로 묶인 것은?

- ㄱ. UN회원국은 당연히 ICJ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 ㄴ. ICJ의 재판관은 자신의 국적국이 분쟁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절차에는 참가할 수 없다.
- ㄷ. ICJ는 '특정한 부류의 사건'(particular categories of cases)을 다루기 위한 소재판부(chamber)를 설치할 수 있다.
- ㄹ. 선택조항(optional clause) 수락선언시 수락국은 기간의 유보를 달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노동법

문 1. 노동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전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②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④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문 2. 노동법의 법원(法源)의 적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판례에 의함)

- ①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여성을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무효이다.
- ③ 상여금지급약정에서 정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④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직기준을 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문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유효요건이 아닌 것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 ①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0조 제2항)
- ② 보상휴가제(제55조의2)
- ③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6조 제3항)
- ④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8조 제1항)
- ⑤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의 합의(제52조 제1항)

문 4.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로 보는 것은?

- ① 사업주가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채용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 ② 사업주가 근로여성에게 수유시간을 부여한 경우
- ③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④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간의 정년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 ⑤ 사업주가 정당한 조건을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채용을 하였으나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문 5. 쟁의행위가 금지된 근로자는?

- ① 정부투자기관 직원
- ② 초등학교 교원
- ③ 민간항공사 비행기 조종사
- ④ 시내버스 기사
- ⑤ 석유정제회사 직원

문 6.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공립학교 중등교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군인과 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③ 헌법상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일 뿐이지 단결체로서 노동조합의 권리는 아니다.
- ④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 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 중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문 7. 임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 3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 임금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 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③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입법화되기 전에도 판례는 이를 인정하여 왔다.

문 9.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 ① 법정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다.
-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1일에 2시간, 1년에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 ⑤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문 10.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노사협의회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며, 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③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회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사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으로만 구성한다.

문 11.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산전·산후를 통하여 6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문 12.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로만 묶인 것은?

ㄱ. 국민연금법	ㄴ. 노인복지법
ㄷ. 영유아보육법	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ㅁ. 국민건강보험법	

- ① ㄴ, ㄹ
- ② ㄷ, ㅁ
- ③ ㄱ, ㄴ
- ④ ㄱ, ㅁ
- ⑤ ㄷ, ㄹ

문 1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반반씩 부담한다.
- ②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③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 ④ 보험급여에는 노령급여, 실업급여 및 유족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 ⑤ 보험료 산정에는 해당 업체의 영업실적을 감안한다.

문 14.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② 판례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항상 유효하다.
- ③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 ④ 판례에 의하면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변경된 취업규칙도 변경 후 신규입사자에게는 적용된다.
- 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 15.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로 정해져야 한다.
-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16.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②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 ③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은 전부가 무효이다.
- ④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 ⑤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대비하기 위한 신원보증계약은 위약 예정금지 규정에 반한다.

문 17.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
- ② 파업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파업 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③ 직장폐쇄는 헌법상 근로3권에 기초한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일종의 대항수단이다.
-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 근로자를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문 18.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만으로 묵인 것은?

- |                     |
|---------------------|
| ㄱ. 총회의 해산결의         |
| ㄴ. 합병으로 인한 소멸       |
| ㄷ. 소속 상부연합단체의 제명처분  |
| ㄹ. 노동부장관의 해산명령      |
| ㅁ.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 ① ㄱ, ㄷ, ㅁ
- ② ㄴ, ㄹ,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ㅁ

문 19.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등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문 20.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분의 1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다.
- ②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 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문 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아닌 것은?

-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③ 쟁의행위는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인정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이를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 여부에 영향이 없다.
- ② 사업자단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관 또는 규약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도 기준이 된다.
- ③ 사업자단체의 지부, 분회 등 하부조직이 단순히 사업자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독립된 사업자단체로 본다.
- ④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 조직 구성원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법적 형태를 상관하지 않는다.
- 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들의 연합체는 사업자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할부계약의 내용이 같은 법의 규정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매수인의 철회권
- ② 매수인의 항변권
- ③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 ④ 매수인의 기한이익의 상실
- ⑤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문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②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 ③ 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④ 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 ⑤ 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문 7.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단체의 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 ②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가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더라도 벌칙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문 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화물운송업 업종의 약관은 명시 의무가 면제되나, 사업자는 약관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나,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④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객은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기업결합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인 회사의 임원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의 취득을 통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하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문 10.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甲은 乙과 게임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판매한 게임기기를 자신과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2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甲의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 의함)

- ① 구입강제
- ② 판매목표강제
- ③ 배타조건부거래
-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⑤ 거래처이전방해

문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끼워팔기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하는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란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염매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⑤ 구입강제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 12.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같은 법상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
- ②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 ③ 위반행위의 목적
- ④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⑤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문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②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 ③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 ④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

문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 ①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는 없고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는 유효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15.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들로만 묶은 것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인터넷사업자가 일정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기간 경과 후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조항</li> <li>ㄴ. 이동통신에 가입한 고객은 1년 후에 비로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li> <li>ㄷ. 은행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li> <li>ㄹ. 자동차판매업자가 고객의 편의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및 수선에 관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시킬 수 있다는 조항</li> <li>ㅁ. 이동통신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이외에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는 조항</li> </ol> |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 의함)

- ① 패스트푸드음식점들이 공동으로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② 건설회사들이 신축공사 입찰을 앞두고 특정 공법 및 설비를 기본설계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설계조정한 행위 -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③ 주류업자들이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④ 신용카드회사들이 할부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⑤ 제약회사들이 비타민을 판매함에 있어 공동으로 판매량 할당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문 17.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관이란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약관은 그 명칭·형태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거래의 중요한 계약내용 전부를 담고 있을 필요도 없다.
- ③ 약관은 이를 사용할 사업자가 반드시 스스로 만든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④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제로 다수의 계약에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 ⑤ 계약의 내용이 되는 주된 급부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부수적 의무에 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 18.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 ③ 불만처리에 필요한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④ 소비자의 청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재화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문 19.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선택하여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 ② 청약의 철회로 인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대금환급의무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지급받은 재화 등을 미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④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은 13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⑤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다.

문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ㄱ. 회사의 합병<br>ㄴ. 영업 일부의 양수<br>ㄷ. 담보권의 실행<br>ㄹ. 대물변제의 수령<br>ㅁ. 영업 전부의 양도 |
|--|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문 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특허권자가 특허보호기간 중에 독점적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2.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같은 법이 정한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피해구제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만 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즉시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④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 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 23. 다음은 할부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의 철회권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철회의 효력발생시기는 ( )에 의한다. 다만,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선박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와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 및 제3호에 의하여 할부가격이 ( ) 이하(신용카드 사용시 ( )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① 7일, 발신주의, 10만원, 20만원
- ② 7일, 도달주의, 10만원, 20만원
- ③ 14일, 발신주의, 20만원, 30만원
- ④ 14일, 도달주의, 20만원, 30만원
- ⑤ 21일, 발신주의, 10만원, 30만원

문 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 ②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 ③ 출자총액제한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④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문 2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br>나. 사이버몰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br>다. 사업자등록번호<br>르. 호스트서버의 주소<br>모. 전자우편주소 |
|---|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모
- ③ 나, 다, 르
- ④ 나, 르, 모
- ⑤ 다, 르, 모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